"1천억대 복분자酒 시장 잡아라"

전국 30여업체 '토종와인' 생산·판매 나서

보해·선운산복분자 선점 속 군소업체 경쟁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 유행으로 포도주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와인'을 표방하는 복분자주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해 복분자주'는 한·중 정상회담 공식만찬주로 선정된데 이어 연간 3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 전국 복분자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1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복분자주는 매년 30~40% 판매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시장규모는 2004년 400억원 가량에서 2005년 650억원, 2006년 8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2007년 시장규모는 1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복분자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 주류업체들도 복분자주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 복분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복분자를 원료로 하는 군소업체도 늘고 있다.

이중 보해양조는 '보해 복분자'를 미국·중국·뉴질랜드·인도네시아 등 1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러시아·우즈베키스탄·나이지리아 등에도 수출을 타진 중이다.

특히 전국 30여개가 넘는 생산업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장점유율에서 30% 이상을 확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보해 복분자'는 2004년 처음 시장에 진출해 61억원의 매출을 올린 후 2006년 316억 가량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보해 복분자'는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중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의 공식만찬주로 선정되면서 한껏 주가를 끌어올렸다.

또 제 1회 대한민국 주류품평회에서 최고 명품주를 수상한 데 이어 세계와인경쟁대회에서도 동메달을 수상했다. 2위인 '산매수'는 2006년 13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국순당이 2007년 7월,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과 함께 100% 고창 복분자만을 사용한 프리미엄급 복분자 주 '명작 복분자'를 출시했다.

'명작 복분자'는 웰빙족과 싱글족을 겨냥한 '미니어처 명작 복분자'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과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 함평천지복분자영농법인의 '레드마운틴', 지리산산수유영농조합법인이 출시한 '산수복분자주'와 '반달곰복분자주' 등이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채식요리가 좋아요" 최근 '광우병 파동' 등으로 건강한 식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수프림 마스터TV 진행자들이 12일 광주신세계 문화센터에서 '채식요리를 통한 지구환경캠페인' 강좌를 펼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육식에 대한 폐해와 건강한 식단 만드는 법 등이 소개돼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광주신세계 제공〉

불복청구 증빙 자료 국세청 "찾아줍니다"

15일부터 현장확인·조회청구제 시행

국세청이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입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직접 구하기 힘들었던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대신 조회하고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12일 과세통지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오는 15일부터 불복 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와 불복 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는 납세자나 대리인이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 불복 청구 심리기관에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가 지정한 사업장, 물건소재지, 거래처 등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추가 증빙을 제출받아 이를 심리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항공사진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복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제한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 관련인의 비협조로 거래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 조회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심리기관이 불복 쟁점과 관련이 있는 지를 검토해 금융정보조회로 금융증빙을 수집해 심리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경영부실' 수협 통폐합

재정 평가후 7월 중 구조조정 착수

경영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수협이 통폐합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심층평가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오는 7월 중 부실수협의 새로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정도가 심한 조합의 경우 합병 등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선 수협에 대한 작년말 기준 경영평가 결과, 대부분 조합의 경우 부실규모가 줄어드는 등 상황이 개선됐으나 일부는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신규 손실을 내는 등 오히려 경영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과 함께 순자본비율 등 경영 목표를 양해각서(MOU)를 통해 약속한 42개 수협만 살펴보면, 25곳이 목표를 이행한 반면 나머지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5개 조합은 순자본비율이 평균 0.6% 개선됐고, 미처리결손금도 193억원 줄었다. 특히 5개 조합은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돼 경영 대선자금 지원이나 MOU를 통한 경영간섭이 필요없게 됐다.

/연합뉴스

농촌사랑 주부 글잔치 농협광주본부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와 (사)고향을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광주시지회(회장 박묘님)가 '농촌사랑 주부글잔치'를 개최한다.

20세 이상 국내 거주 주부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여성결혼이민자 응모는 우대한다. 농촌사랑이나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으로 생활속의 우리 농·축산물 애용 실천운동,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사례, 농촌체험이나 농촌일손돕기 경험 등을 주제로 하면 된다.

응모요령은 원고지 10~20매 또는 A4용지 3~5매 분량의 수필을 오는 31일까지 우편(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8-2 농협광주본부 2층 지도경제팀 '주부글잔치 담당자' 앞, 우편번호 506-726)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62)603-6552.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건설기업 체감경기 1년7개월래 최저

미분양·자재비 급등 … 4월 중 CBSI 6.8P 하락

급증하는 미분양 아파트와 자재비 급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3월보다 6.8포인트 하락한 51.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9월(50.9) 이후 1년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로써 CBSI는 건설 자재비 급등의 영향으로 3월, 전월대비 16.8포인트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의 지수가 각각 46.2와 43.1로, 50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심각성을 더했다. 또한 자재비 지수는 전월대비 8.7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24.7에 그쳐, 자재비 급등에 따른 경영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같은 자재비 지수는 2004년 3월 17.5를 기록한 이후 4년1개월만의 최저치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미분양 증가와 자재비 상승으로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면서 "건설업계에는 전혀 봄기운이 감돌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경련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확 바꿔야"

주변 경쟁국 비해 인센티브 부족·규제는 더 많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가 주변 경쟁국에 비해 인센티브는 부족한 반면 규제는 지나치게 많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손질이 시급하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전경련은 12일 내놓은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를 투자촉진의 촉매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 등 관련제도를 두바이,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만 각종 개별법이 별도로 적영돼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의 법정처리 기한은 270일이지만 광양만 화양지구는 671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480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로 싱가포르(18%), 홍콩(16.5%), 두바이(면제) 등에 비해 높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제조, 물류, 관광호텔업 등 특정산업에만 적용돼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 및 상업시설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지정된 6개 기업도시도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지원의 미흡 등으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개발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도시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커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사업시행과정에서 개발이익의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 것도 문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연합뉴스